2026년 지방정부 혁신 실행계획

2026. 4.

하 동 군

목 차

Ⅰ. 총괄표 ····· 1

Ⅱ. 추진과제 ····· 4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4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 10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 14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19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43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71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87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96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102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5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109

Ⅲ. 소확신 과제 ····· 111

Ⅳ. 정부혁신 확산 방안 ····· 113

Ⅰ. 총괄표

주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 청년이 원하는대로 하동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역활력추진단	2026. 1. ~ 12.
2. 현장중심 열린 소통행정 이동군수실 운영	행정과	2026. 8. ~ 9.
3. 하동군 정책자문단 운영	기획예산과	2026. 1. ~ 12.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1. 열린 군정회의 유튜브 공개	기획예산과	2026. 1. ~ 12.
2. 양방향 소통채널 하동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운영	행정과	2026. 1. ~ 12.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1. 소통협력관(민원상담관) 운영	민원과	2026. 1. ~ 12.
2.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운영	민원과	2026. 1. ~ 12.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1. 별천지 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지역활력추진단	2026. 1. ~ 12.
2.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정화조 청소비 지원	수도사업과	2026. 1. ~ 12.
3.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	주민행복과	2026. 1. ~ 12.
4.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도시과	2026. 6. ~ 12.
5. 행복택시 운행 확대	안전교통과	2026. 1. ~ 12.
6.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보건정책과	2026. 4. ~ 12.
7.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보건정책과	2026. 1. ~ 12.
8.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농축산과	2026. 1. ~ 12.
9.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확대	농축산과	2026. 3. ~ 12.
10.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 운영	재정관리과	2026. 4. ~ 12.
11. 찾아가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농축산과	2026. 1. ~ 12.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대표과제]** 경남최초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	지역활력추진단	2026. 1. ~ 12.
2.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	지역활력추진단	2026. 1. ~ 12.
3.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주민행복과	2026. 1. ~ 12.
4.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가족정책과	2026. 1. ~ 12.
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확대	가족정책과	2026. 1. ~ 12.
6. 산불진화지원단(중간조직) 운영	산림과	2026. 1. ~ 12.
7.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보건정책과	2026. 1. ~ 12.
8. 생활밀착형 건강복합센터 조성	도시과	2026. 1. ~ 12.
9. 청년가족 맞춤주택 조성	건축과	2026. 1. ~ 12.
10. 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투자유치과	2026. 1. ~ 12.
11.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건축과	2026. 1. ~ 12.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1. 해양관광지 지정을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관광진흥과	2026. 1. ~ 12.
2. 하동 반값여행	관광진흥과	2026. 1. ~ 12.
3.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도시과	2026. 1. ~ 12.
4.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안전교통과	2026. 1. ~ 12.
5. 하동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과	2026. 1. ~ 12.
6. 대규모 차밭조성	농산물유통과	2026. 3. ~ 12.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1. 대화형 온라인 보조금 통합 플랫폼 구축	행정과	2026. 1. ~ 6.
2.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도시과	2026. 1. ~ 12.
3. 스마트한 카카오톡 체납세 알림톡 발송	재정관리과	2026. 3. ~ 12.
4.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농업소득과	2026. 1. ~ 12.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1.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행정과	2026. 1. ~ 12.
2.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행정과	2026. 1. ~ 12.
3. 재정운용 효율화 전략 수립 컨설팅	기획예산과	2026. 1. ~ 5.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1. 2026 하동군 공직활력 UP 프로젝트	행정과	2026. 1. ~ 12.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AI 음성기반 하동 온(ON)소리 구축	행정과	2026. 5. ~ 11.
2.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안전교통과	2026. 1. ~ 1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 AI 정보혁신 교육	행정과	2026. 5. ~ 10.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방정부혁신) 과제

1. 무허가 건축물 상수도 공급,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도사업과	2026. 1. ~ 12.

Ⅱ. 추진과제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1 청년이 원하는대로 하동청년네트워크 운영

주관부서	지역활력추진단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청년정책	연락처	055-880-7154

□ 추진배경

○ 지역 청년층 유출과 정착 기반 약화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

○ 청년 정책 수요가 다양화·세분화 됨에 따라 정책 수립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반영 필요성 증대

○ 기존 정책 전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요구 증대

□ 세부 추진사항

○ 2기 청년네트워크 현황

- 임기 : 2025. 4. 1. ~ 2027. 3. 31.
- 구성 : 4개 분과, 25명

* 살자리 분과, 설자리 분과, 놀자리 분과, 일자리 분과

○ 청년정책네트워크 정기회의 : 월 1회 이상

○ 다양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주관 행사 지원

- 워크숍, 기획행사, 성과공유회 등

○ 하동청년센터 운영으로 정책네트워크와 지역 청년의 구심점 확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군정 모니터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혜자 의견반영 제한 • 행정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현장 수요와 정책 간 괴리 발생 • 지역청년들의 교류와 정보공유 기반 부족	• 수요자에서 정책 입안자로 청년의 역할 변화 •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 민·관협력기반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추진의 연계성 및 연속성 확보 • 지역활동 참여 확대로 정착 기반 마련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운영비 10,000천원

○ 기획행사 실시 12,000천원

○ 청년의 날 행사 지원 15,000천원

○ 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개최 3,000천원

□ 추진일정

○ 2026. 1. ~ 12. : 정기회의 개최(월 1회 이상)

○ 2026. 5. : 청년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 2026. 7. : 제3회 하동청년 야간 체육대회 개최

○ 2026. 9. : 제2기 하동청년네트워크 청년의 날 행사 개최

○ 2026. 12. : 성과공유회 개최

□ 홍보계획

○ 지역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현장 홍보

○ 청년 이용시설 중심 홍보물 배포

○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 관심주제와 연계한 카드뉴스,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1-2 현장중심 열린 소통행정 이동군수실 운영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행정	연락처	055-880-2154

□ 추진배경

○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 추진 군민 요구 증가

○ 효과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방소멸대응,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결과와 후속조치 안내 부족에 따른 군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

□ 세부 추진사항

○ 군정 주요현황 보고

- 군의 정책과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한 기관장, 담당부서장의 설명
- 평소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실시간 해결
- 현장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수요 파악과 민원사항 청취

○ 현장소통 처리상황 피드백

- 이전의 이동군수실, 다양한 군민과의 대화 시 제시된 군민 의견 처리계획과 추진사항 공유

*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추진불가 사항은 즉시 주민에게 안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13개 읍면 군정 성과 및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군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관리와 설명으로 신뢰도 향상

* 부서장 회의를 통한 추진사항 보고회 및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안내 부족으로 신뢰도 저하 • 군 정책과 읍면의 사업에 대한 인지와 이해 부족 • 행정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 정책(사업)의 책임자의 직접 설명으로 군민 체감 이해도 향상 • 적절한 피드백으로 군정 신뢰도 향상 •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과 사업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2026. 7. : 이동군수실 운영계획 수립

○ 2026. 8. ~ 9. : 읍면별 이동군수실 개최

□ 홍보계획

○ 이동군수실 개최 전 현수막 게첨, 읍면 주민 안내

○ 이장회의, 읍면 방송을 통한 홍보

○ 개최 후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1-3 하동군 정책자문단 운영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전략기획	연락처	055-880-2014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다양해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반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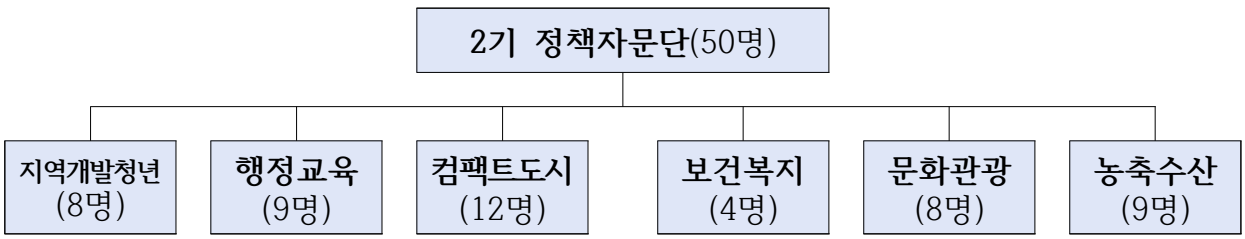
- 민간 전문가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 전략과 정책 효과 확보
-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 행정의 전문성 보완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동력 확보

□ 세부 추진사항

○ 2기 정책자문단 현황

- 임기 : 2025. 3. 7. ~ 2026. 12. 31.
- 구성 : 6개 분과, 50명



○ 2026년 하동군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 2026. 2.

- 분기별 대면회의 1회 개최

  * 공모사업 등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안건 우선 제출

- 서면회의 수시 개최 및 카카오톡 등 활용한 속도감 있는 자문
- 부서 자문요청 시 자문의 목적과 정책방향 명확화

  * 대면회의 시 정확한 현안 파악을 위한 담당자 참석 필수

- 정책자문단의 자문에 대한 정책 반영결과 공유로 피드백 강화

-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출을 넘어 신규 정책 발굴·제안으로 역할 확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분과별 분기별 대면회의 1회 추진
- 부서별 1건 이상 안건 제출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행정의 입장에서 지역 현실반영 미흡 • 관련 부서 간 협업 부진 • 자문수요, 결과에 대한 실적 평가 미비 • 자문역할 한정	• 전문가와 관련 주민의견 반영으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향상 • 정책 시행과정 점검과 사후평가로 개선 필요사항 피드백 제공 • 중점 정책과제 설정으로 공통 안건 토의 • 지역 현안과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자문위원수당 19,500천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026. 4. : 정책자문단 분과회의 추진

○ 2026. 12. : 3기 정책자문단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2-1 열린 군정회의 유튜브 공개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전략기획	연락처	055-880-2013

□ 추진배경

○ 행정 운영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 확대와 투명성 강화 필요성 증대

○ 각종 지원사업,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요구

○ 비대면·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 행정정보 공개 필요

-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기존의 정보전달 체계만으로는 부족

□ 세부 추진사항

○ 매월 2회 격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열린 군정회의를 유튜브(하동TV) 공개 회의로 운영

-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공
- 조직 내 형식주의 타파, 편안하고 쉬운 어법으로 유연한 행정 구현

○ 부서별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행사 홍보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과 정책 추진사항 등 올바른 군정 정보를 가감없이 전달

- 정책에 대한 직접 소통체계 마련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인식 격차 완화

○ 유튜브 회의 시 다양한 계층의 군민 초청

-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군정에 대한 소회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군정회의 온라인 공개를 통한 행정정보의 상시 공개 체계 구축
- 군민과 군정에 관심이 있는 타지인까지 누구나 정책 추진과정에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회의내용이 내부 공유에 한정되어 정보의 접근성 부족 • 정책 추진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행정 운영의 투명성 한계 •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정보만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맥락 전달 미흡	• 정책 추진과정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주민의 정책 이해도 향상으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활성화 • 공개 행정을 통한 조직 운영 개방성과 효율성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2026. 1. ~ 12. : 매월 2회(격주)로 열린 군정회의 유튜브 공개

□ 홍보계획

○ 공개 일정 정례화와 정기 업로드로 주민 인지도 제고

○ 주요 회의내용 숏츠 제작·배포로 열린 군정회의 접근성 강화

○ 내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전 부서 홍보 참여 유도

2-2 양방향 소통 채널 하동 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운영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정보통신	연락처	055-880-2173

□ 추진배경

○ 기존 자유게시판은 광고성 글이 난무하고 일방적인 의견표출에 머무는 등 소통의 한계

-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게시판을 폐지하고, 하동군 모든 군정소식을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및 주인의식 고취

□ 세부 추진사항

○ 군 홈페이지 내 하동사랑방(팝업 표출), 하동알리미 개설

- 다양한 군정 시책이나 사업 정보에 대한 정보격차 해결
- 본인이 설정한 관심분야의 새로운 정보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때마다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수신

* 일자리, 생활정보, 농업 등 20개 관심분야와 관심지역 설정 가능

○ 모든 정책정보가 하동사랑방에서 군민에게 공유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운영

○ 행정용어를 군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

○ 군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로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분야별로 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군정 정보의 통합 전달과 군민 필요정보 신속한 전달
- 하동알리미 신청자 2,500명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수요자가 홈페이지 내 분산된 창구에서 정보를 찾아 확인함으로써 중요 정보의 누락, 지역 전달 등 군민 불편사항 발생	• 공식적 소통 플랫폼인 하동사랑방에서 주요 정보를 통합 수신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민첩한 소식 전달 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군 민	⇨	전 부서	⇨	행정과	⇨	전 부서
홈페이지 관심분야 설정 (신청)		군정 정보 홈페이지 등록(분야설정)		댓글, 조회수 등 공공데이터로 분석		공공데이터 통계 활용

□ 추진일정

○ 2026. 1. : 하동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운영 현황 분석

○ 2026. 2. : 홍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홍보계획

○ (온 라 인) SNS, 유튜브, 밴드 등 활용

○ (오프라인) 보도자료, 현수막,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3-1 소통협력관(민원상담관) 운영

주관부서	민원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종합민원	연락처	055-880-2097

□ 추진배경

○ 하동군을 방문하는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여러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행정 구현

○ 행정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전문인력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운영대상 : 하동군민

○ 운영목적

-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행정 구현
-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군민 대상 상담 접근성 강화
- 군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쌍방향 소통 창구역할 수행

○ 운영내용

-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상담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
-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
-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민생현안사항 파악
- 고충민원 상담 및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행정구현
- 전문성과 친절성을 갖춘 상담운영으로 군민의 신뢰와 만족 확보
- 군민과 소통을 통한 민생현안 파악 및 군민의 군정 참여 촉진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단편적인 민원상담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 한계 • 반복·유사민원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행정력 소모와 민원 불편 지속 • 초기 단계 조정기능 부족으로 인한 민원 장기화 사례 발생	• 다부서 연계 상세한 민원상담과 현장 확인으로 신속한 현황 파악과 해결방안 도출로 행정 신뢰 제고 • 반복·유사민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 갈등 예방, 민원인 정서적 안정 기여 • 초기단계 민원 조율(조정)으로 법적분쟁·반복민원 발생 감소, 행정 효율성 향상 • 군민 수요의 체계적 파악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인건비 50,000천원

○ 기타 운영비 6,000천원

□ 추진일정

○ 2023. 5. :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11. : 소통협력(민원상담)관 임용 및 군민상담센터 운영

○ 2026. 1. ~ 12. : 소통협력관 지속 운영

□ 홍보계획

○ 군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SNS 등 홍보

3-2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운영

주관부서	민원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별천지기동대	연락처	055-880-7253

□ 추진배경

○ 고령화 심화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택설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 존재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0% 이상
- 노후주택 비율이 75%로 시설 고장 및 유지보수 수요 지속 증가

○ 서비스 업체 부족과 지역 편중으로 소규모 생활불편은 민간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 사소하지만 주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생활불편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 저해

○ 다양한 생활불편 요소 증가에도 공적 대응체계 부재로 개인 부담 가중

-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경남 최초 생활민원기동대, 별천지 빨리처리기동대 운영

- 사적영역으로 여겨지던 생활민원 영역에 공적인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 대표번호(055-880-8272) 접수 → 현장확인 →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 현장 중심 기동반 운영으로 크고 작은 생활 현안에 발빠른 대응

  * 작은 불편이 큰 불만이 되기 전에 신속히 해결하는 '불편을 지우는 사람들'

○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분 야	내 용	비 고
전기시설	전등,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등 수리 및 교체	소규모·단순 설비 수리
수도설비	수도꼭지, 샤워기 수리 및 교체, 싱크대, 세면대 배관 뚫기 등	
기타	문 손잡이, 경첩 등 교체 및 방충망 보수 등	

○ 전 군민 대상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른 서비스 기준 차별화

- 업무 과부화에 따른 직원 부담 완화, 주민 만족도 높이는 서비스 추진

* 취약계층 : 무상지원(재료비 1회 5만원 이내, 연간 20만원까지)
* 일반군민 :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서비스 지원, 재료 본인 구입(본인부담)
* 제외대상 :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상가, 빈집, 창고 등),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 찾아가는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운영

- 개별 신청·개별 출동 위주의 운영 방식에 효율성 제고

* 동일 지역 내 유사민원이 분산 처리되는 한계 발생

- 읍·면 또는 마을 단위 사전 신청으로 하루에 집중 처리 추진

* 동일 지역 내 5가구 이상 신청 시
* 기존 방식과 병행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생활민원 처리시간 단축 : 평균 0.5일 내 처리 체계 유지

- 민원처리 건수 확대 : 연간 500건 이상 처리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령층, 취약계층, 1인가구의 생활불편 처리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환경 유지 저해	• 신속한 대응으로 기다림 없는 행정 실현 • 원스톱 처리 체계로 민원 접근성 개선 • 기초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보편적인 복지 실현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군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기 제정('24. 7. 30.)

□ ’26년 소요예산

○ 현장처리반 인건비 62,000천원

○ 운영 소모품 및 차량 운영비 등 63,000천원

○ 민원처리 장비 및 재료 구입비 72,000천원

□ 추진체계

불편사항 접수 (880-8272)	⇒	상세상담	⇒	현장확인	⇒	즉시처리 또는 처리일 안내

- 처리불가 시 해당 민원처리부서 인계 또는 전문업체 안내

○ 하동소방서와 협조체계 구축

-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 활동 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교체가 필요한 경우 하동소방서 지원 요청 처리

□ 추진일정

○ 2026. 1. ~ 12. : 별천지 빨리처리기동대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결과 정기 분석(분기 또는 반기)

□ 홍보계획

○ 홍보 포스터, 냉장고 자석 등 홍보물 제작·배포

○ 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시책 선정 등 보도자료 활용

○ 향우회 정기총회 등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 위주 정책 홍보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4-1 별천지 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주관부서	지역활력추진단	협조기관/부서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동농협
담당팀명	일자리창출	연락처	055-880-2193

□ 추진배경

○ 일자리 지원 기능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 운영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에 구조적 한계 발생

○ 이에 분산된 일자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구직자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효율적인 인력 매칭을 지원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 일자리센터 이전 및 일자리 유관기관 통합 운영

- (기존)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이전) 하동비즈니스센터
- 취업상담사 1인 운영 체계에서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1인, 농촌인력중개센터 1인 추가 배치 및 운영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일자리 수요데이)

- 구인·구직 수요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 개최
- 일자리 상담, 취업 교육, 기업 현장 면접 등 운영

* 협력체계 : 하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내 사회적 기업, 주간·요양보호센터 등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취업, 사후관리 등

○ 채용 정보 관리·홍보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수 증가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분산된 취업 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정보 획득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발굴의 어려움 • 중복적인 상담 문의 및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 통합적인 일자리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인재 알선 가능 • 기관 통합으로 원스톱 일자리 정보 제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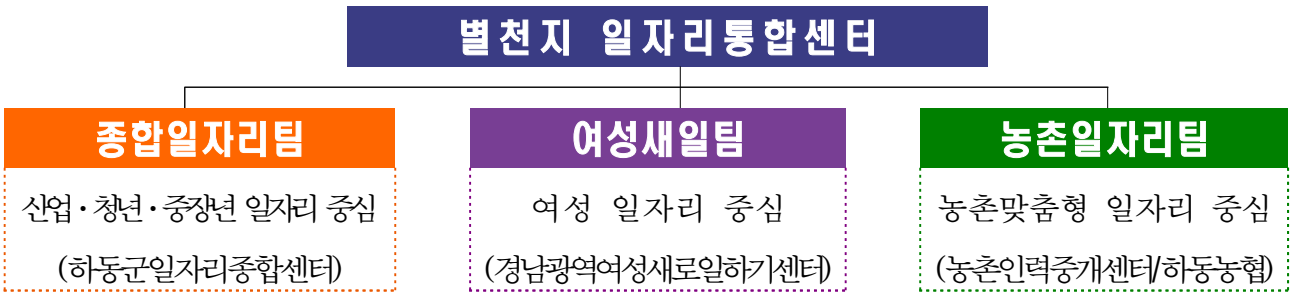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센터 운영비, 교육 및 채용행사 운영 80,000천원

□ 추진체계

○ 유관기관 기능을 통합한 일자리센터 운영



□ 추진일정

○ 2026. 1. ~ 12. : 일자리 통합센터 이전 개소 및 통합 운영

□ 홍보계획

○ 각 읍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4-2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정화조 청소비 지원

주관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하수도운영	연락처	055-880-2608

□ 추진배경

○ 정화조는「하수도법」에 따라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한 필수 위생시설로 정기 미이행 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 인근 주민 생활불편과 민원 증가 등 환경과 공중위생 문제로 확대

○ 취약계층은 소액이지만 주기적인 청소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으로 관리 소홀 우려

- 위생 환경 악화로 건강권 침해 가능성 증가

○ 행정의 사후 단속 중심의 관리는 실효성이 낮아 사전 지원 중심 정책 전환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

□ 세부 추진사항

○「하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제정」('25.12.30.)

- 하동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청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 군민 건강 보호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등

- 지원사항 : 가구당 정화조 청소비 23,000원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관내 대상가구 정화조 청소 이행률 90% 이상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 부족 • 취약계층의 정화조 청소비 부담 • 정화조 청소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생활 환경 열악, 환경 문제 유발	•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 체계 확립 • 경제적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민원 감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제정('25. 12. 30.)

□ '26년 소요예산

○ 정화조 청소비 23,000천원

□ 추진체계

신청	조사·결정	지급	확인조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하동군 → 분뇨수집 · 운반업체	부당 지원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지원신청서 접수 : 대상자 → 읍면사무소

○ 대상자 여부 확인 : 읍면사무소

○ 신청가구 방문 정화조 청소 대행 : 분뇨수거업체(3개소)

○ 분뇨수거확인서 등 서류 제출 : 분뇨수거업체 → 수도사업과

○ 청소비 지급 : 수도사업과 → 분뇨수거업체

□ 추진일정

○ 2026. 1. : 청소비 지원사업 시행

○ 2026. 2. ~ 3. : 읍면별 대상자 현황 파악

○ 2026. 5. : 읍면별 이장회의 참석·사업 홍보

□ 홍보계획

○ 대상자 중심 직접 전달 홍보 강화

-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사업신청 안내 등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현장 접수 병행

○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전달체계 활용

○ 복지회관, 경로당 등 안내문 비치 및 현수막 게첨

4-3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

주관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기관/부서	전읍면
담당팀명	복지기획	연락처	055-880-2343

□ 추진배경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사업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 제외

○ 주요내용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연 10만 원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제공

○ 확대 추진사항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내용	목욕비 지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대상	75세 이상 어르신	**70세 이상** 어르신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	연 60천원	**연 70천원**	**연 100천원**
사용처	주소지 읍면 목욕탕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 가맹업소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 가맹업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연간 11,000명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위생관리 취약 • 개인위생 저하에 따른 건강문제발생 •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사회적 고립 발생	• 기본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 및 우울감 감소 • 피부질환 및 위생관련 질병 예방 • 사회적 교류 확대로 고립감 완화 •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체감형 복지 확대 • 이미용 업소, 목욕업소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 현황

○ 해당없음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25. 1. 1.)

□ '26년 소요예산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비 11억원

□ 추진일정

○ 2026. 1. : 상반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카드 집중 신청
상반기 사업시행(카드 충전 및 사용 개시)

○ 2026. 6. : 하반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집중 신청

○ 2026. 7. : 하반기 사업시행(카드 충전 및 사용 개시)

□ 홍보계획

○ 분기별 지원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 군 홈페이지 및 SNS 게시, 이장회의를 통한 신청 홍보

4-4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주관부서	도시과	협조기관/부서	농협중앙회 / 하동군지부
담당팀명	지역개발	연락처	055-880-6973

□ 추진배경

○ 농촌 및 외곽지역 생활편의시설 부족

- 전통시장과 상점의 접근성이 낮아 생필품 구매 불편 발생
- 고령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 제한으로 소비활동 제약
-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지역 생산품 소비 확대와 순환경제 기반 마련 필요

○ 지역 공동체 기능 약화

- 주민 간 교류 감소 및 지역 활력 저하
- 장터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기능 상실

□ 세부 추진사항

○ 이동장터 운영체계 구축

- 이동판매 차량으로 권역별 순회형 이동장터 운영
- 주요 거점(마을회관, 공터 등) 중심 장터 운영

○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으로 판매 품목 구성

○ 마을단위 운영협의체 구성

- 장터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운영 지역 및 품목 조정

○ 고령자 대상 이동장터 이용 지원(장보기 서비스 등)

○ 지역화폐 및 할인제도 도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이동장터 연간 100회 이상 운영 및 10,000명 이상 이용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부족 • 주민 교류 감소 • 취약계층 소비활동 제한	• 찾아가는 장터로 접근성 대폭 개선 • 장터 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 맞춤형 서비스로 생활편의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이동장터 운영 지침」제정

- 운영 주기, 장소 선정, 참여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26년 소요예산

○ 차량구입 및 개조 5억원, 유류비·인건비 등 운영 1억원

□ 추진체계

○ 하동군 : 기본계획 승인(농림부) 및 차량 구입·개조, 운영지침 마련

○ 농　협 : 참여 농가 모집, 물품 수급 및 일정 운영

□ 추진일정

○ 2026. 6. : 기본계획 승인(농림부)

○ 2026. 7. : 농협 위탁협약 체결

○ 2026. 8. : 차량 구입 및 개조

○ 2026. 9. : 화개·악양면 권역 우선 시범운영

□ 홍보계획

○ SNS, 유튜브,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이장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배포

4-5 행복택시 운행 확대

주관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교통정책	연락처	055-880-2394

□ 추진배경

○ 도로협소, 인구감소 등으로 수익성 저하 버스 미운행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 버스노선 증차요구에 대해 비용부담이 적고, 주민들의 운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운송수단 도입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시행시기 : 2026. 1. 1.

○ 대상마을 : 81개 마을(기존 76개 + 5개 마을 추가)

○ 운행기준

-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6km이상 떨어진 마을
- 기타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마을(통학버스 미운행 마을, 등하교 시간 내 노선버스 미운행 마을)

○ 운행구간 : 마을에서 거주지 읍·면 소재지(목적지)까지 원칙

○ 운행요금 : 택시 한 대당 주민부담금 100원(※ 차액분 군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중교통 미운행·감축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
- 이용 대상·구간 확대를 통한 이용률 증대
- 실질 이용요금(100원)으로 교통비 절감과 100원버스 이용 주민과의 형평성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버스 미운행으로 지역 이동 불편 • 병원 이용, 장보기 등 일상활동 제약	• 이동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 개선 • 사회적 고립 완화와 복지 수준 향상 •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전달 효율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기시행

□ '26년 소요예산

○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4억원

□ 추진일정

○ 2026. 1. ~ 2026. 12. 행복택시 운행

○ 2026. 11. 운행지역 확대 검토

□ 홍보계획

○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실시

4-6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진주제일병원
담당팀명	의료혁신	연락처	055-880-7175

□ 추진배경

○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은 지리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 상황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개선 및 건강형평성 제고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거주지 인근 보건진료소로 방문해 화상장비(웹캠, 휴대용 태블릿)로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처방과 건강상담

○ 등록 대상자 정례적 원격협진(진료·처방 등) 서비스

-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진찰)와 처방(처치·투약), 기타 건강상담

○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및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교육

- 처방받은 의약품의 명칭, 복용방법과 시간,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에 대한 안내
-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상담

*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사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목표건수 100건 달성
-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70% 이상 만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의료취약지 주민의 전문의 진료 접근성 제한 • 경증 환자도 상급병원 방문 필요시 이동 시간과 비용 증가	• 전문의와 실시간 협진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증진 • 불필요한 이동 감소로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협진비 4,000천원

○ 운영비 8,000천원

□ 추진체계

○ 민간의료기관 1개소(진주제일병원) ↔ 보건진료소 18개소

※ 담당의 :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김동준 과장

□ 추진일정

○ 2025. 1. : 하동군-진주제일병원 업무협약식(MOU) 체결

○ 2025. 4. : 원격협진 운영 시작(보건진료소 ↔ 제일병원)

○ 2026. 1. :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운영·개선 의견 조사

○ 2026. 4. : 원격협진 금요일 진료 확대 시범 운영

○ 2026. 5. ~ : 원격협진 격주 금요일 진료 확대 운영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격주 금요일 오후 4시

□ 홍보계획

○ 유튜브 열린 군정회의 및 마을방송 등

4-7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예방접종	연락처	055-880-6913

□ 추진배경

○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위험이 높아 예방을 위한 접종 대상 확대 필요**

-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병률 높으며 심한 통증, 신경통 등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

- 대상포진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발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 **고가의 백신비로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큼**

-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접근성 향상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접종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지원사항 : 대상포진 백신비 1회 지원(과거 접종자 제외)

- 65세 이상 군민 → 위탁의료기관(시행비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보건지소(시행비 무료)

* 시행비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개인부담(약 2만원)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그 밖의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3,000명

-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을 통해 대상포진 발생률 감소
- 합병증 및 후유증 감소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수준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접종대상 단계별 확대 계획(안) - '24년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25년 : 65세~69세 군민 - '26년 : 65~74세 군민 - '27년 : 65~79세 군민 - '28년 : 65세 이상 군민	• 접종대상 확대 - '26년 : 65세 이상 모든 군민 • 대상포진에 따른 직접 의료비와 간접 손실비용 감소 •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공공보건 기능 강화

□ '26년 소요예산

○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 2억7천만원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기 시행(2025.12.30.)

□ 추진일정

○ 2023. 9. 20. :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 2024. 3.~12.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2026. 3.~12.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65세~69세 일반군민)

○ 2025. 12. 30.: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 2026. 1.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65세 이상 군민)

□ 홍보계획

○ 홍보 포스터 보건소(보건지소), 읍면사무소, 관내 의료기관 등 배부

○ 카드뉴스 제작으로 SNS 홍보 등

4-8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주관부서	농축산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농업혁신	연락처	055-880-7185

□ 추진배경

○ 농가단위 계절근로제(5개월 고용)만으로는 일주단위 단기고용 등 다양한 농가 인력 수요 충족 한계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세부 추진사항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지원

○ 운영방식

- 지리산청학농협(농촌인력중계센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며, 농가 요청에 따라 필요 기간동안 인력 공급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규모	농가당 최대 6명	
지원기간	농가당 최대 30일 이내	
숙식·교통	공동 숙소(하남체험휴양마을) 및 농가 현장 수송 지원	
이용료	근로자 인금, 이동비, 보험료 등 고려하여 책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도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대농 위주의 인력배정으로 인해 중소농·영세농 인력난의 사각지대 발생 •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수확 시기 변동 시 유연한 인력 대체 불가 • 개별 농가 관리 부주의로 인한 근로자 무단이탈(불법체류) 위험 상존	• 1일 단위 배정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농가도 인력 혜택을 골고루 누림 • 운영기관(농협)의 관리로 작물별 수확 적기에 맞춘 기동력 있는 인력 투입 가능 • 전담 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근로자 이탈 방지 및 인권 보호 강화

□ '26년 소요예산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인건비 등 2억5천만원

□ 추진체계

구 분	시·도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부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6224)	하동군 농축산과 (055-880-7182)	지리산청학농협
역 할	■도 농업인력수급 총괄 ■시군에 사업비 배정 ■부진 센터 지도·점검	■지방비 예산 확보 ■센터에 보조금 교부 ■관할 센터 지도·점검	■구인 농가 수요조사 ■영농작업반 구축·운영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인력편성	■3명 (팀장 1,실무 2)	■7명 (계장 1,실무 3, 계약직3)	■4명 (차장 1, 담당자 1 계약직2)
사무실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TEL : 000-123-4567)	하동군청 농축산과 (TEL : 055-880-7182)	지리산청학농협 (TEL :055-880-4516)

□ 추진일정

○ 2025. 12.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선정

○ 2026. 1. :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 계획 수립

○ 2026. 2. : 공동숙소이용 협의 및 MOU 체결 지역(몽골) 대상 인력 모집 요청 완료

○ 2026. 4. : 몽골 계절근로자 현지 선발 및 희망농가 신청 수요조사

○ 2026. 6. : 사업 시행(인력배치)

4-9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확대

주관부서	농축산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농업정책	연락처	055-880-2414

□ 추진배경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농업인들의 가사노동 경감과 고령농,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들의 식사문제 해소와 마을공동체 유대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동 급식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참여가능한 마을

- 영농 고령가구(65세 이상)와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50세 미만) 가구가 많고, 운영 의지가 높은 마을 우선 지원
- 개소당 급식인원 20명 이상 및 조리원 필수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부식비·운영비(사업비 5% 이내)

- 단가 : (인건비) 55천원/일, (부식비) 4천원/일, (운영기간) 예산범위 내

  * 급식 인원 및 운영기간에 따라 세부항목 예산배분 마을 자율 편성
  * 운영기간은 최소 20일 이상, 농번기를 감안하여 연 2회 분할운영 가능

○ 운영방법 : 공동급식(도시락, 배달식, 식당이용 시 신청 불가)

○ 지원한도 : 마을당 7백만원 이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의 단계적 확대 운영을 통한 농촌 맞춤형 복지모델 구축
- 2026년 114개 마을 지원 목표

  * 2024년 : 17개 마을 지원 → 2025년 : 92개 마을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농번기 가사노동 가중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식사문제 발생 • 주민들의 접점 부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유대관계 소홀	•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을 통한 가사 노동의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을 통한 마을의 유대관계 개선 및 화합도 상승 • 포용적 공공서비스를 통한 농촌복지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구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2024.11.15.) 기 시행

□ '26년 소요예산

○ 공동식당 인건비 등 7억1천2백만원

□ 추진일정

○ '26. 1.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 '26.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26. 3. : 사업대상마을 선정 및 보조금 교부(114개마을 697백만원)

○ '26. 4. ~ : 사업시행

○ '26. 12.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4-10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 운영

주관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세정	연락처	055-880-2273

□ 추진배경

○ 국세·지방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신고·납부의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금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다면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영세업자, 저소득층 등은 세무사 상담비용 부담으로 세무서비스 접근에 한계 발생

○ 관공서 또는 세무사무실 중심의 상담으로 고령자나 생업 종사자는 방문 상담 자체가 어려운 구조

○ 세금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현장중심 상담 수요 지속 증가

□ 세부 추진사항

○ 대상 : 국세·지방세 및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주민

○ 운영방식

- 지역소상공인협회·시장상인회 등과 협의, 사전 예약 방식 운영
- 세무 상담 노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담 공간과 대기 공간 분리 운영
- 지방세 과세 관청의 부과·징수, 세무조사·체납처분 과정상의 위법·부당 행위 등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과 연계 원스톱 법률 세무 서비스 구축

○ 상담분야 :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 등 세무 전반

○ 상담원 : 마을 세무사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납세자보호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주민 세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신고 → 체납 → 납세 불신·불순응	• 세금 상담을 통해 탈루·실수 신고 감소 • 세무부서로 집중되는 단순 민원 감소 • 세금에 대한 이해도 증가→납세 순응도 상승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2026. 3. : 마을세무사 자체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운영 방안, 홍보계획 등을 수립 · 추진

○ 2026. 4. : 현장 종합 세무상담 실시

- 운영 성과와 수요 분석 후 확대 운영 추진

○ 지방세 정기 신고 납부 기간 집중 상담 서비스 제공

-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현장에서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 각종 행사 활용 상담 서비스 제공

- 귀농 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홍보계획

○ 주민 접점 밀착형 홍보 추진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장회의, 사회단체회의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 비치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공공전광판(군청로비, 읍내로터리, 진교민다리복합타운 등) 활용
- 지방세 납부고지서 여백 활용 홍보
- 마을세무사 명함 세무부서 비치 및 민원인 제공

4-11 찾아가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주관부서	농축산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축산위생	연락처	055-880-2675

□ 추진배경

○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여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차단필요

○ 교통이 불편한 사육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성화 지원을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찾아가는 수술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보호소 연계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중성화 수술과 함께 동물등록(내장형 칩) 의무 병행하여 관리체계 강화

○ 2026년 사업량 : 125마리(암컷기준)

○ 지원단가

- 중성화 : (암컷) 360천원, (수컷) 180천원
- 동물등록 : 40천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125마리 이상 달성(사업량 100%)
-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통 취약계층 참여 비율 50% 이상 확보
- 동물등록 병행추진으로 사업 대상견 등록률 100%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동물 발생 지속 • 농촌지역 동물병원 부족으로 중성화 및 동물등록 참여 저조 •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제한	• 실외사육견 중성화 확대로 번식 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지역 동물의료 접근성 향상 • 교통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 확대 및 복지 체감도 제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

* 사업대상,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기준 마련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정의 및 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

□ '26년 소요예산

○ 실외사육견 중성화 및 동물등록 지원 5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육장소 소재지 마을대표(이장)을 통해 마을별 신청

○ 마을대표는 희망자 조사 후 읍면사무소 제출 → 농축산과 전달

○ 지정 동물병원에서는 마을별 일정 협의 후 방문 수술 시행

○ 동물병원은 중성화 등 비용 농축산과로 청구 및 정산

□ 홍보계획

○ 마을단위 신청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홍보 강화

-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 사업 취지,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참여 독려

- 마을방송,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 추진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5-1 경남 최초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

주관부서	지역활력추진단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인구정책	연락처	055-880-2844

□ 추진배경

○ 저출생 심화에 따른 자연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 체감물가 상승 등 양육비 부담 가중

- 기존 출산 장려 지원금과 양육 지원금만으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에 부족
- 「2025년 인구정책 군민 설문조사」 결과,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 '현금지원정책(49%)'

  * 현금성 지원 수준이 올라갈 경우 28%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

-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 정책 도입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구 분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20만원**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원칙
지급방법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매월 25일 지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출생 순위 및 소득기준과 무관한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로 인구 감소 위기 적극 대응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분절된 지원방식으로 효과 저하 • 초기 체감도가 높은 단기 유인 효과	• 출생 이후 양육과정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월 지원 방식 • 장기 양육 지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체감도 유지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경제 순환구조 확립 •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로 편의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2025.12.)

- 기존 출산장려금, 쌍둥이이상 등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수당 폐지
-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 및 환수 규정

○ 2026. 5.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개정

-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하여 관외 보육서비스 이용자 지급 규정 신설

□ ’26년 소요예산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27억

□ 추진일정

○ 2024. 1. :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계획 수립

○ 2024. 2. ~ 2025. 10. : 사회보장제도 신설 지속 협의(보건복지부)

○ 2024. 11. ~ 2025. 6. : 보건복지부 협의기준 완화 공동 건의(4회)

○ 2025. 11.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 2025. 11. : 하동형 육아수당 설문조사(전 군민, 1,234명 참여)

○ 2025. 12. : 하동형 육아수당 설명회 개최(전 군민, 200명 참석)

○ 2026. 1. ~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시행

○ 2026. 3. : 하동형 육아수당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

-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 별천지하동쇼핑몰 온라인 베이비페어 개최, 지역 축협 매장 내 육아용품 매대 설치 등

○ 2026. 5. :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세부지침 개정

□ 홍보계획

○ 출생신고 시 육아수당 신청 동시 진행

○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5-2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

주관부서	지역활력추진단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인구정책	연락처	055-880-2844

□ 추진배경

○ 경상남도「경남도민연금」추진 등 자산형성형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로 중년·노년 중심 지원에서 중장년층까지 정책 대상 확대 요구 증가

* 2026년 경남도민연금 추진 현황(예정) : 255명, 소요예산 30,600천원(군비)

○ 영유아, 청년·노인지원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장년층(46~59세) 대상 직접 지원정책 부재로 정책 체감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 군내 46세~59세 인구수 : 8,668명(남 4,811명, 여 3,857명) (국가통계포탈, 2026. 1. 기준)

○ 특히,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모 부양책임 등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핵심 생산연령층으로 지역의 중추적 계층임에도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

□ 세부 추진사항

구 분	하동형 군민연금 세부 내용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하동군민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가입연령	**만 46세 ~ 60세 미만(1967. 1. 1. ~ 1980. 12. 31. 출생)**
모집규모	**연 1,000명(예정)**
소득조건	소득구간별 순차 선발(예정)
모집방식	인구구조 및 재정여건 반영 연간 모집규모 자체 설계 운영
급여구조 (지원방식)	납입금 매칭 지원 * 월 10만원 적립(군비 2만원+자부담 8만원) * 연간 적립액 120만원(군비 24만원+자부담 96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하동형 군민연금 가입자 총 5,000명('26~'30년 5년간 매년 1,000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중장년층(46~59세) 대상 직접 지원정책 부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 중장년층 자산형성형 정책으로 촘촘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수립 • 단기적 인구유입 정책 보완 및 지역내 생활기반 유지 촉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2026. 하반기 :「하동형 군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6년 소요예산

○ 하동형 군민연금 지원 2억4천원

□ 추진일정

○ 2026. 1. : 하동형 군민연금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하동형 군민연금 신설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1차)

○ 2026. 3. : 지역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자문

○ 2026. 4. : 하동형 군민연금 신설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2차)

○ 2026. 4. ~ :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보건복지부) 및 금융기관 협의

○ 2026. 하반기 : 하동형 군민연금 시행

□ 홍보계획

○ 군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사업 시행 시 지역 방송과 신문 집중 노출

5-3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주관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기관/부서	가족정책과
담당팀명	장애인복지	연락처	055-880-2213

□ 추진배경

○ 지역 내 장애인 인구 증가 및 복지 수요 다양화에 따라 통합적·전문적 지원체계 필요

- 기존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상담·재활·역량강화·자립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구축 요구 증가
- 장애인과 가족의 정보 접근성 부족, 서비스 연계 미흡 문제 해결

□ 세부 추진사항

○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오감만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친화도시 조성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시 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주민참여형 장애친화도시 조성, 중증·와상장애인 생활동선 기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장애인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자립생활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 능력 향상 교육(대중교통,장보기,금융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 연계 등

○ 인식, 문화, 참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 인문학 콘서트(연7회), 장애인 복지박람회, 나눔 미술은행 전시회 등 문화 참여 확대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과 협업 네트워크 강화

  * 장애인단체·시설 간담회 및 의견수렴 창구 운영

-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확대 : 연 50명 → 연 100명 확대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혜 인원 : 연 1,000명대 → 연 2,000명대 확대
- 이용자·종사자 만족도 향상 : 82% → 90% 이상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단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 낮음 • 기관 간 연계 부족 및 중복 지원 발생 • 이동 불편으로 서비스 접근 제한 • 문화·사회 참여 기회 부족	•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 향상 •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및 환경개선으로 접근성 향상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기회 확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인건비 : 1.3억, 프로그램 운영비 0.6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 0.3억, 홍보 및 행사운영 0.8억

□ 추진체계

○ 주민행복과

- 사업 총괄, 예산 확보 및 행정 지원

○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 사업 운영,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 대상자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현장 의견 수렴

○ 의료기관·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 전문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 추진일정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6. : 장애친화도시 조성 및 연구 용역 시행

○ 2026. 2. ~ 11. : 인문학 콘서트 개최(총 7회)

○ 2026. 4. : 장애인 복지박람회 및 문화행사 개최

○ 2026. 5. ~ 12. : 장애인 역량강화·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 2026. 5. ~ 9. : 와상·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 2026. 9. :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2026. 12. : 장애인 단체·시설 성과 공유회 개최

□ 홍보계획

○ 홍보방법

- 군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 활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홍보물 배포
- 다양한 현장 홍보 병행

  *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등 주요 행사 연계 홍보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중심 홍보 강화

○ 홍보내용

-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 안내
-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 홍보
- 우수사례 및 체감형 성과 중심 홍보

5-4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주관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기관/부서	관내 어린이집
담당팀명	아동청소년	연락처	055-880-2815

□ 추진배경

○ 맞벌이 가정 증가, 근무형태 다양화(야간·교대근무 등)로 인해 취약시간대 보육 수요 지속 증가

○ 취약시간대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부족 및 정보 접근성 미흡으로 보육 사각지대 발생

○ 보육 공백 발생 시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 및 일·가정 양립 곤란 등 사회적 문제 초래

□ 세부 추진사항

○ 운영기간 : 365일 운영(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제외)

○ 운영시간 : 평일 18: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07:00 ~ 23:00

○ 운영시설 : 2개소 / 하동읍(하동어린이집), 진교면(예원어린이집)

○ 보육대상 : 도내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내·외국인)

○ 이 용 료 : 시간당 1,000원(부모부담)

○ 반 구성

- 1개반 5명으로 구성하고 연령별 혼합보육 가능
- 평일야간반(18:00 ~ 24:00), 휴일반(07:00 ~ 23:00)으로 나누어 운영
- 반별 교사 1명당 최대 5명 이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취약시간대(야간·휴일) 보육 공백 해소를 통한 365일 상시 보육 체계 구축

- 긴급·일시 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365 열린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보육교사 적정 배치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맞벌이·야간근무 가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연장보육 등 기존 서비스로는 수요 대응 한계 •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돌봄수단 부족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가중 및 일·가정 양립 곤란	• 맞벌이·한부모·야간근무 가정 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 지역 내 보육 사각지대 해소로 균형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365열린어린이집 인건비 142,133천원,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19,200천원

□ 추진체계

○ 관내 어린이집 2개소(하동어린이집, 예원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2026. 3. ~ 2027. 2.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 홍보계획

○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등 수시 홍보

5-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확대

주관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기관/부서	장기요양기관
담당팀명	노인시설	연락처	055-880-7124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증대와 요양보호사 현장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시급

○ 기존 수당 지원의 한계 (소수 혜택 및 사각지대 발생)

- 2023년부터 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약 100여명, 전체 인력의 10% 수준)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했으나,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제외
- 기존지원의 연령 상한(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으로 인해 현장 고령 종사자가 수당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세부 추진사항

○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대상확대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 전체 장기요양시설
- 연령폐지 : 연령 상한(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을 전면 폐지하여 만 60세 초과 종사자도 동일하게 혜택 부여

○ 시설 유형별 맞춤형 수당 지원체계 구축

-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 월 5만원 지원 + 명절수당(설·추석) 각 5만원
- 방문요양시설(신설) : 월 3만원 지원 + 명절수당(설·추석) 각 5만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방문요양종사자를 신규로 포함하고, 연령 상한 규정을 폐지하여 수당 지원의 사각지대 완전히 해소
- 수혜 대상 대폭 확대로 현장 요양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직률 감소 등 고용 안정화를 유도
-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하동군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도모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수혜대상 : 약 100~120명(전체 인력의 10% 수준 • 지원범위 :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 연령제한 : 종자사 65세, 시설장 65세 초과 시 제외	• 수혜대상 :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상 확대 (+약 1,000명 혜택 증가 예상) • 지원범위 : 방문요양 시설 추가(신설) • 연령제한 : 연력 상한 전면 폐지 (고령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7.2억

□ 추진체계

○ 매 분기 시설별 수당 일괄 신청 ➡ 군 보조금 교부 ➡ 시설에서 종사자 개인 계좌 직접 입금 및 지급 ➡ 1개월 내 정산 보고

□ 추진일정

○ 2026. 1. ~ 12. : 분기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지급·정산

□ 홍보계획

○ 관내 전 장기요양기관에 상세 안내 공문 발송

○ 시설장 및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시 변경 사항 안내

5-6 산불진화지원단(중간조직) 운영

주관부서	하동군 산림과	협조기관/부서	관내 유관기관 (산림조합, 소방, 경찰 등)
담당팀명	산림보호	연락처	055-880-2475

□ 추진배경

○ 산불 초기 대응의 필요성

- 산불 발생 초기 30분 이내 대응이 확산 및 대형화 여부 좌우
-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도착 전 초동 대응 공백 발생 가능성 상존
-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접근 지연 시 급격한 확산 위험

○ 2025년 3월 대형산불 경험으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 직면

- 초기 억제·생활권 방어 인력 부족

  * 산불감시원 역할 범위 한계

- 산불발생 초기 생활권 방어 및 확산 차단 전담 인력 공백 발생

○ 하동군 산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 생활권과 산림 연접 지형으로 초기 단계에서 생활권 방어 체계 강화 필요

[산불진화지원단 도입 필요성]

· 전문진화대 도착 전 초기 억제/확산 방지 즉시 투입 인력 필요
· 전문진화대와 공무원 지원 인력 간의 간극을 최소화 할 중간조직 필요
· 산불진화지원단을 즉시 투입하여 초기대응 및 진화 보조인력으로 운영하여 대응 공백 최소화
· 생활권 방어/확산 차단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조직과 역할 분담
· 인구소멸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 효과 제고

□ 세부 추진사항

○ 읍·면 단위 소규모 진화조직 구성 및 운영

- 3개 권역, 약 30명 규모 운영
- 봄·가을 산불취약기간 집중 운영
- 생활권 중심 초기대응 전담

  * 산불 발생 시 즉시 현장 투입, 생활권 방어 및 확산 차단 역할 수행

○ 초동 대응 중심 현장 대응체계 구축

-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초기 → 1단계 → 2단계)

  * 초기대응 시 진화지원단 즉시 투입, 대형산불 확산 전 차단 중심 운영

- 산불취약지역 집중 관리

  * 생활권·시설 주변 중심 방어선 구축, 인화물 제거 및 예방활동 강화

○ 생활권 방어 인프라 구축

- 생활권 산불 진화통로(임도 등) 확보
- 거점 대기장소 지정 및 신속 출동체계 구축
- 산불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 확대

  * 마을단위 교육 및 홍보 병행

○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정기 교육·훈련 및 모의훈련 반복 실시
- 장비 확충 및 개인장비 지원

  * 개인진화장비, 방연마스크, 헤드랜턴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산불 초기 대응시간 단축 * (기존) 30분 이상 → (개선) 20분 이내
- 생활권 산불 피해 감소 *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효과
- 산불 초동 진화 성공률 증가 * 70% → 90%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대응체계) 전문인력 중심 대응 • (초기대응) 지연 및 산불 확산 우려 • (주민안전)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가	• (대응체계) 지역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 (초기대응) 즉각 대응 및 확산 차단 • (주민안전) 대형산불 확산 방지로 주민 체감형 안전 확보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산불방지 종합대책」보완 : 산불진화지원단 운영체계 명확화

□ '26년 소요예산

○ 인건비 3.4억, 장비구입 및 기타경비 2억

□ 추진일정

○ 2026. 1. : 하동군 산불대응 5대 전략 수립

○ 2026. 2. : 봄철 산불진화지원단 모집

○ 2026. 3. ~ 5. : 봄철 산불진화지원단 운영

- 3개 권역별(화개·악양, 청암·옥종, 하동읍) 총 30명 내외

○ 2026. 11. ~ :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산불진화지원단 운영

5-7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기관/부서	도시과
담당팀명	의료혁신	연락처	055-880-7173

□ 추진배경

○ 지역 의료여건 취약

- 하동은 응급실 기준시간(30분) 내 이용률 2.5%로 매우 열악한 환경
- 응급, 소아청소년, 분만 3개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의료비 관외 유출 심화

- 하동군민 연간 의료비 1,288억원 중 관외 이용 973억(76%)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

○ 의약분업 예외지역 다수

- 전체 13개 읍면 중 9개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

○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개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 일원(현 보건소 부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총사업비 : 34,543백만원
- 사업내용 :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1식(지하1층, 지상3층)

* 면　　적 : 부지 11,052㎡
* 연 면 적 : 6,356.32㎡(증축 3,886.47㎡, 개보수 2,469.85㎡)
* 병상규모 : 40병상, 7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 주요시설 : 입원실, 응급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 추진현황

- 2022. 9. :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 구축 추진계획 수립
- 2022. 12. :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5. 5.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
- 2025. 12. : 보건의료원 공사 착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설립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공급 충족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병원급 의료기관 부재로 관외 의료기관 이용 의존도 높음 • 응급 및 긴급 상황 시 지역 내 대응 기반 부족 • 감염병·재난 대응 인프라 미흡 •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장거리 이동 등 주민 불편 지속	• 공공의료 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응급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지역 내 초기 대응 역량 확보 • 감염병 및 재난 발생 시 지역 내 대응 기반 강화 •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군민 체감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보건의료원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보건의료원의 설치 목적, 기능 및 운영(수가,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6년 소요예산

○ 공사비 등 129.19억

□ 추진일정

○ 2027. 6. : 공사 준공

○ 2027. 7. : 보건의료원 시범운영 및 정식 개원

□ 홍보계획

○ 하동군 홈페이지(보건소 공지사항, 하동 사랑방) 및 소식지 게재

○ 보도자료, 유튜브 열린군정회의를 통한 주기적인 진행사항 홍보

5-8 생활밀착형 건강복합센터 조성

주관부서	도시과	협조기관/부서	보건소 / 건강증진과
담당팀명	지역개발	연락처	055-880-6973

□ 추진배경

○ 지역 내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 의료기관은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상적 건강관리 기능 부족
-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설 및 프로그램 미흡

○ 생활 속 건강관리 환경 부족

- 체육시설과 보건서비스가 분산되어 이용 효율성 저하
- 주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운동·영양·정신건강 등) 운영 한계

○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체계 미흡

- 건강교육 및 상담 참여율 저조
-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 부족

○ 대주민 소통 및 서비스 개선

- 정기적인 주민설명회 및 건강강좌 운영
- 온라인 건강관리 플랫폼 및 상담 창구 운영
- 현장 방문형 건강서비스(찾아가는 프로그램) 실시

□ 세부 추진사항

○ 건강복합센터 조성

- 운동·재활·건강교육이 결합된 복합공간 구축
- 실내 운동시설, 건강상담실,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 성인 : 만성질환 예방(운동·영양관리) 프로그램
- 노인 : 낙상예방, 근력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동아리 및 자율 운동모임 활성화
- 주민 건강리더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

○ 대주민 소통 및 서비스 개선
- 정기적인 주민설명회 및 건강강좌 운영
- 온라인 건강관리 플랫폼 및 상담 창구 운영
- 현장 방문형 건강서비스(찾아가는 프로그램)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건강복합센터 이용 주민 수 연간 5,000명 이상 확보
- 지역 주민 체력·건강지표(비만율, 혈압관리 등) 개선
- 주민 만족도 80% 이상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치료 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 건강시설 분산 및 접근성 낮음 • 주민 참여 저조 • 일회성 건강교육 중심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통합형 건강복합서비스 제공 • 주민 주도 건강관리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건강복합센터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마련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근거 명시

□ '26년 소요예산

○ 용역비 6억, 역량강화교육비 2억

□ 추진일정

○ 2026. 6. : 기본계획 승인(농림부)

○ 2026. 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7.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7. 7. : 시행계획 승인(경남도)

○ 2027. 8. : 공사 착공

○ 2029. 12. : 사업 준공 및 운영

□ 홍보계획

○ 군청 홈페이지 및 SNS, 유튜브 열린군정회의를 통한 지속 홍보

○ 읍면 이장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배포

5-9 청년가족 맞춤주택 조성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기관/부서	도시과
담당팀명	건축행정	연락처	055-880-2134

□ 추진배경

○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신축 공급률 저하 등 지역 정주 여건 부족으로 인구 유출 심각

○ 청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 공급 필요

○ 청년, 근로자, 신혼가구 등 청년 유형별 수요 대응, 다양한 형태 주거 공급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4. 1. ~ 2027. 7.

○ 사업위치 : 하동읍 비파리 360-2 일원

○ 사 업 비 : 12,474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임대주택(24세대) 조성

* 전용면적 65.7㎡ 22세대, 42.89㎡ 2세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청년가족 24세대 입주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 2025년 기 조성된 청년타운의 1인가구 위주 주거형태	•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따른 청년가족 지역 정착 도모 • 청년 부부, 어린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알맞은 주거형태 제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건축비 31.2억

□ 추진일정

○ 2023. 10. 27.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 2024. 7. 26. :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2025. 11.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1. 30. :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 2026. 3. 2. : 공사 착공

○ 2027. 6. : 공사 준공 및 입주

□ 홍보계획

○ 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 유튜브 열린군정회의를 통한 수시 군민 안내

5-10 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주관부서	투자유치과	협조기관/부서	도시과, 재정관리과, 국가철도공단
담당팀명	투자정책	연락처	055-880-2613

□ 추진배경

○ 대송산업단지 준공 임박에 따른 주거 문제 심화

- 대송산단(42만평)의 기성율이 98%로 준공이 임박하였으나,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기반은 부족
- 높은 주거비용으로 근로자 정착 어려움 및 기업 인력난 가중

* 산업단지 인근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 이상으로 청년 근로자 부담 과중

○ 2024. 6.「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공모 선정

- 특별교부세 70억원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8호 건립

-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12 일원 (3,426㎡)
- 규　모 : 4층 연립형 2동, 연면적 2,097.71㎡ / 원룸형 48호
- 임대료 : 0원 임대주택으로 책정하여 주거비 부담 제로화

* 기 조성된 청년타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 예정

○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주거 수요조사와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계 추진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취득 및 사용승인 협의 추진
- 경상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이행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2027년 12월까지 공공임대주택 48호 준공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높은 주거비로 인한 청년 근로자 이탈 • 기업 인력난으로 생산성 저하 • 산업단지 주변 주거 인프라 부족 • 월평균 주거비 40만원 이상 부담	• 안정적인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정착률 향상 • 우수 인력 확보로 투자유치 활성화 • 산업단지-주거단지 연계 활성화 • 청년근로자 주거비 부담 제로화 (0원 임대주택)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기 제정 (2025. 11.)

  * 입주자격, 임대료 산정기준 및 지원, 관리운영, 입주자 의무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26년 소요예산

○ 용역비 및 건축비 100.2억

□ 추진체계

○ 사업 총괄 : 하동군 투자유치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추진

○ 협력부서 및 기관

- 도시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연계 추진, 통합 설계·건축
- 재정관리과 : 설계공모 및 계약 업무 지원
- 경상남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국가철도공단 : 부지 사용승인 및 매매
- 대송산단 입주기업 : 입주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추진일정

○ 2026. 4. : 실시설계 준공, 경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 2026. 5. : 경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근로자 수요조사

○ 2026. 6. : 부지 사용승인 및 취득절차 추진

○ 2026. 7. : 공사 착공

○ 2027. 10. :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7. 12. : 공사 준공 및 입주 개시

□ 홍보계획

○ 단계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착공 전 :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심 홍보
- 공사 중 : 공정현황 및 안전관리 중심 홍보
- 준공 전 : 입주자 모집 및 운영계획 중심 홍보

○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 언론매체 : 착공식, 준공식 등 주요 시점 보도자료 배포
- SNS : 하동군 공식 SNS를 통한 공사 진행상황 정기 업데이트
- 현장 홍보 : 공사현장 안내판 설치 및 주민 견학 프로그램 운영

5-11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건축행정	연락처	055-880-2134

□ 추진배경

○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절차 미적용, 공공기관보다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 가능

* 공공기관에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택지 확보에서 입주까지 3~4년의 기간이 소요 되는데 비해 매입임대의 경우 1~2년의 기간이 소요

○ 민간사업자 공사 시행으로 공공건축물 대비 공사비 절감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25. 9. ~ 2028. 12.

○ 사 업 비 : 5,800백만원(국 2,385, 군 3,415)

○ 사업내용 : 임대주택(50호) 매입

- 전용면적 26~36㎡

* 임대주택 매입 공모계획 수립 시 전용면적 및 공급 호수 변경 가능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청년가구 50세대 입주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 공공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와 비용 부담 발생	• 주거 공급에 따른 청년 지역 정착 • 민간 건설사 사업으로 비용절감과 신속한 추진으로 적기 공급 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매입비 3.8억(※ 주택 매입비 중 일부)

□ 추진일정

○ 2025. 10.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하동군)

○ 2025. 11.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 2025. 12. : 2026년도 매입임대주택 수요조사 제출(하동군→경남도)

- 청년형 50호 신청

○ 2026. 3. : 2026년도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20호)

○ 2026. 4.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6. 6.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 사전 공모(20호)

○ 2026. 8.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 공모(20호)

○ 2026. 10. : 사업자 선정

○ 2026.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6. 12. : 매입약정 체결

○ 2026. 12.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 희망조사 제출(30호)

○ 2027. 1. ~ 2028. : 임대주택 건설

○ 2028. 12.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임대

□ 홍보계획

○ 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6-1 하동 해양관광지 지정을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관광기획	연락처	055-880-2654

□ 추진배경

○ 하동군의 관광형태는 지리산·화개장터 중심의 단순 자연 관람형·경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은 약 16시간으로 전국 평균 대비 짧음

- 숙박방문객 비율은 12.7%로 5년간 지속 감소 추세
- 남해안 일원에 금오산, 다도해, 갯벌, 섬 등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특화 콘텐츠 및 관광 기반시설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

○ 금오산 관광시설과 연계한 해양관광지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산·바다·차가 어우러진 남해안 대표 복합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육성 피요

□ 세부 추진사항

○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진교면 술상리 해안지역 일원(2,386,473㎡) 하동 해양관광지를 지정하여 체류형 해양복합치유관광지를 조성

- 관광지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신청 완료(경상남도지사 지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선(先) 공공개발, 후(後) 민자유치 전략 : 공공 기반시설(진입도로, 주차장, 문화·수변공원 등) 및 핵심 선도시설(해수녹차치유센터, 힐링밸리스테이 등) 먼저 조성하여 집객효과 확보 후 민간투자(골프장, 호텔 등) 유치

- 4개 공간 테마 구성
  * 힐링 Valley Zone(금오산지구) : 하동케이블카·짚와이어 연계,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힐링밸리스테이(스톤스파, 어싱트랙코스 등)
  * 힐링 Sea-Tea Zone : 해양시티골프장, 오션뷰 티하우스, 바다힐링스파
  * 힐링 Community Zone : 해수녹차치유센터, 해양레포츠·갯벌체험센터, 하동먹거리타운
  * 힐링 Terrace Zone : 힐링테라스전망호텔, 힐링녹차풀, 해양명품숲, 수변전망쉼터
- 주민설명회 지속 개최, 관광지 운영인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 농·수산물 연계한 먹거리센터 등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관광지 지정(경상남도 고시) →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 단계별 시설 조성 및 완료 → 목표연도 방문객 유치
- 하동군 숙박방문객 비율 증가 : 현행 12.7% → 20% 이상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경유형·단순관람형 관광 위주, 숙박방문객 비율 12.7%로 저조 • 지리산권 북부 편중으로 남부권 관광 불균형 심화 •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체류형·체험형·치유형 복합 관광지 조성으로 숙박 수요 증가 • 금오산·다도해·야생차 등 자원 통합·연계로 균형있는 관광개발 실현 •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감소 완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관광지 지정 등 용역비 8억

□ 추진체계

○ 하동군(주관): 관광지 지정 신청·행정절차 총괄, 공공 기반시설 및 선도사업 조성, 사유지 매입 추진, 민간투자 유치

○ 민간투자자 : 해양시티골프장, 힐링테라스전망호텔, 하동먹거리타운 등 민간시설 개발·운영

□ 추진일정

○ 2026. 3. ~ 8. : 관련기관 및 경상남도 관련부서 협의

- 농지, 산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2026.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하동군→경남도,유역환경청)

○ 2026.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026. 5. : ’26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회 반영 추진

- 매입대상 : 사유지 약 612필지, 160만㎡

○ 2026. 8. : 해양관광지 지구지정 고시(경상남도)

○ 2027. ~ 2034.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

* 민간투자유치 병행

□ 홍보계획

○ 홍보내용 : 하동 해양관광지 개발방향, 투자유치 여건, 지역상생 방안

○ 홍보 매체 및 방법

- 하동군 공식 SNS(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및 홈페이지 지속 게시
- 경남도 관광 홍보채널 연계 홍보(경남관광 누리집, 경남관광박람회 등)
-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관광정보 채널 등재
- 투자설명회 개최(민간사업자·금융기관 대상)
- 지역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현장 취재 지원

6-2 하동 반값여행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관광마케팅	연락처	055-880-2378

□ 추진배경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필요

○ 소규모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 완화와 여행경비의 지역상품권 사용·지원을 통한 신규 방문객 유치, 재방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비 : 1,420백만원(국비 300, 군비 1,120)

○ 지원대상 : 관외 거주 사전신청 관광객

○ 사업내용

-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하동반값여행 정책발행용)을 구매하여 하동 여행에 사용하면 경비의 50%를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최대 50만원까지 환급

- 정산지원금인 하동반값여행 정책발행용 모바일 상품권은 하동군 제로페이 가맹점 또는 별천지하동 쇼핑몰, 별천지하동 차문화관(부산 소재)에서 사용

  * 사용기한 2026.12.31.까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하동 반값여행 사업을 통해 하동 방문 관광객 10,000팀 이상 유치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소비 증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 재방문 관광객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관광수요 기반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1회성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	• 여행경비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체류시간 증가(필수 방문코스 지정) •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환급으로 재방문 유도하고 어려울 경우 하동쇼핑몰 연계 사용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반값여행 지원금 및 운영비 1.4억

□ 추진일정

○ 2026. 1. : 하동 반값여행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홍보

○ 2026. 2. ~ 3. : 하동 반값여행(하동형) 운영(지원금 3억원)

○ 2026. 2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정부 공모 선정

○ 2026. 4. ~ : 하동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형) 운영 및 홍보
(지원금 10억원)

□ 홍보계획

○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중심 홍보 추진

○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이벤트 운영으로 참여 유도 및 홍보 확산

○ 사업 참여방법 및 여행경비 50% 지원 등 주요 혜택 중심 집중 홍보

6-3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주관부서	도시과	협조기관/부서	기획예산과, 지역활력추진단 농업소득과
담당팀명	지역개발	연락처	055-880-6973

□ 추진배경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청년층 유출 지속 및 농촌지역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
-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부족

○ 귀농·귀촌 수요 대비 정주여건 미흡

- 체계적인 주거단지 및 생활 인프라 부족
-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소득 기반 연계 미흡

○ 지역경제 활성화 한계

- 단순 농업 중심 구조로 소득 다변화 부족
- 체험·관광 연계형 농업모델 미흡

□ 세부 추진사항

○ 에코풀빌리지(귀농귀촌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 친환경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단독주택, 공용 녹지, 커뮤니티 공간)
-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 및 분양형 주택 공급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주차장, 소공원 등) 구축

○ 포시즌베리팜(딸기 재배교육 및 체험시설)

- 스마트팜 기반 딸기 재배 교육시설 구축
- 체험형 농장 운영(가족·관광객 대상)
- 가공·판매 연계로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귀농·귀촌 유입 인구 확보
- 주거단지 입주율 90% 이상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속 • 정주여건 부족으로 정착 어려움 • 단순 농업 중심 소득 구조 • 지역공동체 약화	• 청년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 • 주거·교육·소득 연계 정착 기반 구축 • 체험·교육 연계 복합 소득 창출 • 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개정

- 주거단지 입주 지원 및 정착 지원 확대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지역활력타운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 시설 운영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
- 민간 참여 및 위탁 운영 기준 설정

□ '26년 소요예산

○ 사전 행정절차용역 2억, 실시설계용역 5억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총사업비 : 82억원

□ 추진체계

○ 도시과 : 예산, 행정절차, 공사 추진

○ 지역활력추진단 : 에코풀빌리지 시설 운영

○ 농업소득과 : 포시즌베리팜 시설 운영

□ 추진일정

○ 2026. 5. : 건축설계공모

○ 2026.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6. 11.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6. 12. : 공사 착공

○ 2028. 12. : 사업 준공 및 운영

□ 홍보계획

○ 군청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 읍면 이장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유튜브 홍보

6-4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주관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교통정책	연락처	055-880-2394

□ 추진배경

○ 경전선(부전~순천) 복선전철화 및 KTX-이음 도입을 '27년 예정하고 있으나 하동역 정차 미정

○ 하동역에 현재 1일 왕복 4회 운행으로 교통 소외 및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이동권이 극히 제한적임

○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시대와 하동군 46만명의 생활인구 증가 추세에 맞지 않는 열악한 철도교통 인프라

○ 경제성(B/C 1.23)이 확보된 하동역에 KTX-이음 열차 운행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세부 추진사항

○ 2023. 7. : 하동역 KTX-이음 정차 건의 공문 발송(국토부, 경남도, 철도공사)

○ 2023. 11. :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건의

○ 2024. 5. : 2차관 방문 건의(군수)

○ 2025. 3. : KTX-이음 하동역 정차 및 KTX순환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

○ 2024. 10. : 하동군의회 건의안 발의

○ 2025. 3. : 경남도의회 건의안 발의

○ 2025. 6. : 타당성용역 완료에 따른 건의 공문 발송

-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 2025. 12. : 하동역 KTX-이음 정차 관계기관 회의

-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하동군

○ 2026. 1. :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중(철도공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경전선 KTX-이음 열차 운행계획 하동역 정차 반영
- 출퇴근 시간대 2회 이상, 진주역·순천역의 수도권 KTX 연계 6회 이상 운행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열차 1일 왕복 4회 운행 • 부산(부전)까지 2시간 이상 소요 • 열악한 철도교통 접근성	• 열차 1일 왕복 10회 이상 운행 • 부산(부전)까지 70분 소요 •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관광 활성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타당성 검증 용역비 0.5억

- 타당성 검증 및 하동역 승강장 연장 사업(L=11m) 추후 예산 수립

□ 추진체계

○ 타당성 검증 용역 시행 및 하동역 승강장 연장 사업 : 국가철도공단

○ 경전선 KTX-이음 열차 운행계획 반영 :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 추진일정

○ 2026. 5. ~ 10. : 타당성 검증 용역 시행

○ 2026. 11. ~ 2027. 6. : 하동역 승강장 연장 사업 시행

○ 2027. 7. : 경전선 KTX-이음 열차운행계획 반영

□ 홍보계획

○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실시

6-5 하동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주관부서	투자유치과	협조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담당팀명	기업지원	연락처	055-880-2203

□ 추진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필요

- 지속적 인구 감소, 하동군 인구 4만 붕괴
- 진학·취업을 위한 청년 인구 유출 ⇒ 출생인구 감소 악순환

○ 하동 농식품산업의 우수한 저변과 발전 잠재력

- 하동군 농가 비중 47.8%
-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 의한 다양하고 우수한 특산물

* 농산물(녹차,매실,딸기,대봉감 등), 임산물(밤,고사리,도라지 등), 수산물(재첩,숭어,전어 등)

- 친환경 인증(772ha 592농가) 및 6차산업 인증(33개소) 활성화
- 최근 3년간 관내 주요 식품기업(50개소) 매출액·종사자수 증가

□ 세부 추진사항

○ 사업위치 : 하동읍 화심리 839-2 일원

○ 조성기간 : 2025년 ~ 2029년

○ 규　　모 : 약 312,000㎡

○ 주요내용 : 산업시설용지 156,000㎡, 식품기업 유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 녹지, 공원, 도로, 용수·배수시설, 폐수처리시설
- 공동창고, 공동생산설비, 식품관련 R&D 및 인증 지원기관

○ 주요 추진사항

- 2025. 10. : 하동 농식품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착수
- 2025. 12.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26. 2. : 식품기업 대상 입주수요 및 공동시설 등 수요조사
- 2026. 3. : 기업지원시설 종류 및 규모 검토
- 2026. 4. : 식품기업 방문 및 의견 청취 진행 중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식품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집적에 따른 상호 협력 및 성장
- 농가와 농식품기업 상호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
-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농산물 판로 확보 어려움 • 전통농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인구 증대 •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영농 활성화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연구용역비 7억(추경편성 예정)

□ 추진체계

○ 경상남도 : 30만㎡이상 일반 산업단지 지정권자

○ 개발방식 : 공공개발 / 민간개발 / 민관합동개발

□ 추진일정

○ 2026. 4. : 식품기업 방문 및 의견 청취 진행 중

* 식품기업 의견 반영하여 소규모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산업단지 조성 방안 검토중

○ 2026. 7.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6. 9.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 착수
* 산업단지 승인 신청 이전 주민의견 청취 실시

○ 2027. 10. : 산업단지 지정

○ 2029. 12. : 산업단지 준공

□ 홍보계획

○ 관련 기업체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 방문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 설명

○ 각종 투자유치 박람회 참여를 통한 홍보 지속

6-6 대규모 차밭조성

주관부서	농산물유통과	협조기관/부서	(재)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담당팀명	녹차산업	연락처	055-880-2734

□ 추진배경

○ 하동 차(茶) 산업의 잠재력과 기존 구조의 한계

- 하동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차 산업의 본산지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유
- 현재 하동 차 산업은 대부분 경사지(산지)에 조성된 소규모 다원 중심으로 기계화 채엽과 대량 생산이 어려운 구조를 가짐
- 차 산업은 원물 생산과 일부 가공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과 체류형 소비로의 확장이 제한적임

○ 글로벌 가루녹차 시장 확대와 원료 공급 기반 구축의 필요성

- 최근 풍미와 건강 기능성을 갖춘 음료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 하동군 내에 대규모 기계화·차광 재배가 가능한 평지형 차밭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가루녹차 원료 공급 기반 구축이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8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 사업내용 : 유휴군유지(간척지)에 민관협력을 통한 평지 기계화 녹차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수출용 프리미엄 가루녹차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연계체류형 관광명소화(체험, 파머스마켓 등)로 지역 소득 창출 도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녹차 생엽 수확량 186톤/년, 가루녹차 생산량 47톤/년
- 목표 수익 2,366백만원/년
- 연간 방문객 60,093명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대부분 경사지에 조성된 소규모 다원 중심으로 기계화 채엽과 대량 생산이 어려움 • 차 산업은 원물생산과 일부 가공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과 체류형 소비로의 확장이 제한적	• 민간(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누보)이 주도하고 공공이 기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방식으로 추진 • 생활인구 유입 중심의 체류형 지역 활력 모델 구현 • 고용 창출 효과 : 총 156명 - 녹차 생산단지 관리, 가공시설 운영 및 파머스마켓 운영을 통한 직접고용 약 35명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4.6억(미확보)

□ 추진체계

○ 하동군 : 공원시설 관리, 홍보 및 타 사업과 연계전략 수립

○ ㈜누보 : 차밭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기자재 및 조경기술 지원, 해외 유통 관리

○ (재)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하동가루녹차유기농생산자협회 : 연구·가공·교육 지원, 차밭 운영 및 관리

○ 하동차제조업협회, 청년식품벤처협회 : 파머스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 2026. 3. :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신청 및 현장평가 실시

○ 2026. 6.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공모선정 시)

○ 2026. 6. ~ 2026. 12. : 민관기관 조직화 교육, 마케팅

○ 2026. 8. ~ 2027. 3. :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 2027. 5. ~ 2028. 3. : 지반조성(성토, 배수층), 방풍림 조성

○ 2028. 4. ~ 2028. 10. : 가루녹차단지조성

○ 2028. 4. ~ 2029. 3. : 정원 조성

○ 2029. 1. ~ 2029. 8. : 관리동(묘목장, 창고, 온실 등) 조성

□ 홍보계획

○ 하동군 SNS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예정

○ 프리미엄 차 마켓 운영, 무료 다도 체험 등을 통한 하동 차 브랜드 대내외 홍보 예정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7-1 대화형 온라인 보조금 통합 플랫폼 구축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정보통신	연락처	055-880-2173

□ 추진배경

○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 신청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행정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니어세대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오프라인 대면 홍보 한계로 인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실제 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의 실효성 저하

○ 특히, 교통여건이 열악한 군부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니어세대의 어려움 가중

○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기존 챗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집 신청 기능 구현

○ 대화형 방식으로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 신청 접수

○ 시니어 세대를 위한 직관적인 대화형 인터페이스 구축

○ 각 부서별로 신청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신청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온·오프라인 보조금 신청 병행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오프라인으로만 보조금 신청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별도로 접수 신청자 정리	•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없이 간편하게 보조금 신청 • 온라인 보조금 신청플랫폼에서 신청자 목록과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온라인 보조금 플랫폼 구축 45백만원

□ 추진일정

○ 2026. 1. : 온라인 보조금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2026. 2. : 온라인 보조금 플랫폼 구축 시행

○ 2026. 6. ~ : 온라인 보조금 플랫폼으로 보조금 신청 접수

□ 홍보계획

○ 군 홈페이지 및 하동사랑방 홍보

○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7-2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주관부서	도시과	협조기관/부서	재정관리과
담당팀명	지역개발	연락처	055-880-6973

□ 추진배경

○ 기존 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행정서비스 제공 한계

- 민원 대기공간 부족, 주민 편의시설 미흡
- 행정과 주민활동 공간 분리로 이용 비효율 발생

○ 농촌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 주민 회의,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절대 부족
- 기존 시설은 분산되어 접근성 및 활용도 저조

○ 행정·문화·복지 기능 간 연계 부족

- 주민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고령층 및 교통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

□ 세부 추진사항

○ 행정·문화·복지 기능이 통합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 노후 면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행정서비스 환경 개선
- 민원실, 상담실, 대기공간 등 주민 친화형 행정공간 확충
-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 적용

○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 확충

- 다목적 강당, 주민회의실, 교육실, 동아리실 등 조성
-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 청년·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분리 구성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민원·복지·상담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 배치
- 주민 수요 기반 통합 안내데스크 운영
- 키오스크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대기시간 최소화

○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실시
- 운영 단계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 평균 대기시간 단축
-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률 증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노후 청사 및 협소한 민원공간 • 행정·문화시설 분산 운영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 고령층 접근성 불편	•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주민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무장애 설계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구현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청사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 복합청사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근거 마련
- 시설 사용료 기준 및 감면 규정 신설

○ 시설 운영지침 제정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 공간 예약 및 이용절차 세부 규정 수립

□ ’26년 소요예산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 옥종면 총사업비 60억, 악양면 총사업비 40억

□ 추진체계

○ 도시과 : 사업 총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시설 운영

○ 재정관리과 :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주민위원회 : 시설 내부구성 및 역량강화 의견 제시

□ 추진일정

○ 2026. 8. : 기본계획 승인(경남도)

○ 2026. 9.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7. 4. : 시행계획 승인(경남도)

○ 2027. 5. : 공사 착공

○ 2029. 12. : 사업 준공

□ 홍보계획

○ SNS, 유튜브를 통한 사업내용 및 계획 홍보

7-3 스마트한 카카오톡 체납세 알림톡 발송

주관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세입	연락처	055-880-2292

□ 추진배경

○ 주소지 미거주, 장기 해외거주 등으로 체납고지서 미전달 사례 증가

○ 문자, 전화 체납 독려 등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소요

□ 세부 추진사항

○ 기존 종이고지서로 안내하던 체납내역을 납세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

- 발송대상 : 지방세 전 체납자, 번호판 영치 대상자, 압류 예고 대상자 등
- 납세자별 생성된 고유 CI값을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 연계하여 체납고지서, 안내문 등의 전자문서 발송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및 오배송 문제 해결
- 위택스, 간편결제 서비스 연계로 편리한 납부 가능
- 종이 고지서 사용 감소 및 우편수수료(건당 430원)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실 거주지 불일치 등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 증가 • 체납세 증가로 지자체 재원확보 어려움	• 종이고지서 발송 대비 예산절감 • 고지서 없이도 체납인식 후 납부 • 체납세 납부 증가에 따른 세입 증대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플랫폼 이요료 등 3,850천원, 카카오톡 발송 미용 6,150천원

□ 추진일정

○ 2026. 3. : 전 체납자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4. : 번호판 영치안내문, 100만원 이하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6. : 전 체납자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8. : 압류예고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9. : 번호판 영치안내문, 100만원 이하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11. : 압류예고문, 100만원 이상 체납안내문 발송

○ 2026. 12. : 하반기 전 체납자 체납안내문 발송, 압류예고문 발송

□ 홍보계획

○ 이장회의, 언론 홍보(기시행)

○ 상·하반기 추가 홍보 실시 예정

7-4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주관부서	농업소득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식량특작	연락처	055-880-2423

□ 추진배경

○ 이상기상으로 인한 상시적인 농작물 피해 발생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및 중앙+광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도 향상으로 농업분야 기상재해 사전 피해 예방

□ 세부 추진사항

○ 개별 농장마다 고유 날씨를 추정하고 재배중인 작물 생육시기에 맞는 기상위험을 예측

○ 사전에 기상위험과 관리대책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맞춤형 재해예방 지도

○ 회원가입 후 정보제공 : www.gnares.go.kr/agment

- (미가입농가) 정보 활용 가능/(회원가입) 정보 농가알림 서비스 제공
- (기상정보8종)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일조시간 등
- (대상작물34개) 과수13종, 채소7종, 식량 및 두류 6종, 특용 및 기타 8종
- (재해정보10종)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풍해, 일조 부족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대응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동네예보(5*5km단위)의 포괄적인 범위의 예측 • 폭우, 태풍, 서리 등의 일반적인 기상위험 예보와 대응지침 제공	• 농장단위(30m*30m) 맞춤형 예측 • 내 농장에 맞춘 항목별 날씨 예보 정보와 작물맞춤형 대응지침 제공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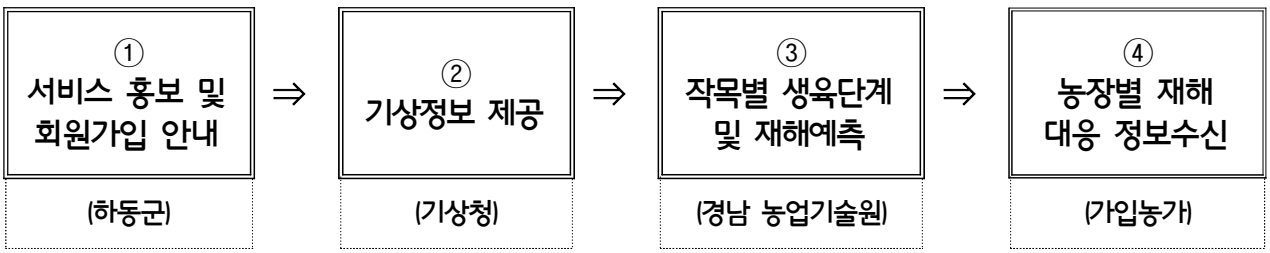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농업기상관측기 교체 및 고도화 사업비 33,000천원

□ 추진일정

○ (연초) 일괄신청, (연중) 개별신청



□ 홍보계획

○ 각종 농업인 단체 연시총회, 농업인 교육,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참여 농가 확대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8-1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행정	연락처	055-880-2168

□ 추진배경

○ 복잡하고, 다양해진 공공시설의 양적, 기능적 확대로 행정인력만으로의 관리에 한계

- 직영방식은 시설별 총괄관리 담당자가 상이하고, 순환 보직제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속성의 단절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함
- 민간위탁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교적 유지관리, 안전, 민원응대 등의 차원에 있어 공익성이 다소 저하됨

○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공익성 향상을 통해 군민 및 방문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필요

- 생활인구와 방문객들에게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 관리에 따른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사항

○ 2023. 4. ~ 6. : 예비타당성 검토(조사) 용역 실시

○ 2023. 12. ~ 2024. 8.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 2025. 2. : 주민공청회 개최

○ 2026. 2. : 경상남도 2차 협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공공시설관리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공익성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각 시설별 업무담당자가 상이하고 인사 이동으로 인해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불가 •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지도 미흡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현행방식 소요인력 85.07명	• 일원화된 관리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공단 운영으로 인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추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공단방식 소요인력 76.08명으로 8.99명 감축 → 인건비 절감 예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 (2024. 8. 20.)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예정 (2026. 6. ~ 7. 중)

□ '26년 소요예산

○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를 위한 전출금 2억(예상)

○ 사무실 이전 및 기타 추진 경비는 추후 산출 예정

□ 추진일정

○ 2026. 4. 30.(예정) :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6. ~ 7.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6. 7. ~ 8. : 시설관리공단 정관 등 제 규정 제정

○ 2026. 9. ~ 10. : 임원임명 및 직원 채용 등

○ 2026. 11. :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 추진

□ 홍보계획

○ 추진상황에 따른 보도자료 지속적인 홍보

○ 임원 임명절차 등 법령 준수를 위한 공고 철저

8-2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행정	연락처	055-880-2153

□ 추진배경

○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

- 기존 행정인력 중심 순환보직 체제만으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 대응에 한계
-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재를 적기에 수혈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하기 위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조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 세부 추진사항

○ 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영역 전문가 적극 채용

- 임기제공무원(민간전문가) 공고 및 채용 : 2024. 1. ~ 현재까지
  * 하동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고 및 채용 : 2022. 7. ~
  * 민간건축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 : 2023. 4. ~
  * 하동군 조경관리 특별대응 전담 공무원 채용 : 2025. 8. ~
  * 하동군 토목사업 지원인력 공무원 채용 : 2025. 8. ~
  * 하동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공고 및 채용 : 2025. 8. ~
  * 투자유치과장(개방형직위) 공고 및 채용 : 2025. 8.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민간의 전문역량과 공직의 공익성을 결합하여 정책 품질을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 확보로 행정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에 한계 • 안정성과 전례 중심의 행정 처리 • 내부 규정 및 관리자 관점의 정책	• 특정 분야 장기 재임으로 고도의 전문성 발휘 및 대응력 강화 • 민간의 전문 지식으로 유연한 문제 해결 • 민관협력을 통한 복합 난제 해결 • 서비스 고도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 향상 • 외부 전문가의 시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되어 정부 신뢰도 향상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일반임기제 인건비 등 8.2억

□ 추진일정

○ 2026. 1. ~ 4. : 별천지하동쇼핑몰 운영요원, 평생학습사, 아동학대 전담, 취재·보도요원 등 민간(임기제) 채용

□ 홍보계획

○ 채용 시 공고문 홍보 등

8-3 재정운용 효율화 전략 수립 컨설팅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예산	연락처	055-880-2023

□ 추진배경

○ 연도 간 이월예산의 지속적 발생으로 재정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 최근 연도 신속집행 실적과 이월·불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단계별 지연 원인과 구조적 문제 규명

○ 집행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 예산 편성-집행-결산 간 연계 강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개선 방안 도출 목적

□ 세부 추진사항

○ 최근 3년 결산 세입·세출 현황 규모 등 재정 현황 분석

○ 신속집행 정책 현황 및 정책 방향, 집행 현황 점검

○ 사업 부서 면담 실시

- 최근 3년 이월 현황 분석 및 이월 예산 집행 가능성 점검
- 사업 유형별(통계목별) 이월 사업 특성 분석

○ 적극적인 신속집행 대응 방안 도출

○ 효율적인 이월 사업 지출구조 개선 방안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성) 이월 발생 주요 사업의 원인 분석 및 유형화
  사업 단계별(설계·계약·집행) 지연 요인 관리체계 구축
- (정량) 회계연도 내 집행률 84% 이상 달성
  신속집행 실적 정부 목표 대비 5% 이상 달성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회계연도 말 집중 집행 등 비효율적 집행 관행 존재 •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 검토 미흡 • 단기 실적 위주의 신속집행 운영	• 계획적·분산 집행을 통한 균형 있는 재정 집행 체계 확립 • 집행 가능성 기반의 예산 편성으로 실효성 강화 • 사업 진도 기반의 실질적 집행 관리 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재정운용 효율화 전략 수립 컨설팅 사업비 24,000천원

□ 추진일정

○ 2026. 1. : 재정운영 개선 컨설팅 계획 보고

○ 2026. 2. : 컨설팅 착수 및 사전 회의

○ 2026. 3. : 컨설팅 대상 사업 조율 및 사전 자료 검토

○ 2026. 4. : 부서별 대상 사업 담당자 면담

○ 2026. 5. : 재정운영 개선 방안 도출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9-1 2026 하동군 공직활력 UP 프로젝트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혁신지원	연락처	055-880-2163

□ 추진배경

○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 우려 및 경직된 획일적 복지제도

- MZ세대 공무원 조기 퇴직률 증가 및 업무 몰입도 하락 등 공직 매력도 저하 현상 심화
- 세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복지로 만족도 저조

○ 성과와 보상의 연계부족

-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실적적 보상 및 동기부여 수단 미흡
- 우수시책, 적극행정, 혁신제안 등 성과 창출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일잘러 해외 배낭연수 실시

- 대　　상 : 우수시책, 적극행정 및 혁신 제안 채택자
- 규　　모 : 연 20~30명 내외
- 내　　용 : 자율 테마(벤치마킹, 정책과제 연계)기획
- 지원한도 : 200만원/인
- 추진기간 : 2026. 3. ~ 11.

○ 자율 기획형 해외 배낭연수 공모제 실시

-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배낭연수의 팀구성, 연수지와 답사방법을 직접 기획하여 전 부서 평가제를 통해 시행

- 규　　모 : 연 70~90명 내외
- 내　　용 : 도시계획, 관광, 유통경제, 자연경관, 인구소멸지역 우수 사례 등 견학을 통한 현안업무 반영
- 지원한도 : 150만원/인
- 추진기간 : 2026. 9. ~ 11.

○ 읍면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사무실 대기근무 관련 권고 개정

○ 맞춤형 선택적 복지 확대

- 만족도를 높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기본포인트 및 자녀포인트 등)
- 생애주기별 복지: 임신편의용품 구입비 지원(40만원), 생일축하금 지원(5만원), 5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50만원/인)
- 가족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특별휴가: 자녀와 배우자 생일, 결혼 기념일 2시간 조기퇴근, 생일 리프레시 휴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일잘러 해외연수 연 20~30명, 공모제 해외배낭연수 5% 확대
- 읍면 재택당직 대기규정 폐지로 연간 당직 대기시간 100% 감축
-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용률 95% 이상, 생애주기별 복지 수혜자 전년 대비 10%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관례적·단체 중심의 해외연수로 우수 공무원 동기부여 부족 • 읍면 재택당직 시 불필요한 1시간 사무실 대기로 근무 피로도 누적 • 획일적 복지제도로 세대·생애주기별 수요 반영 미흡 • 중장년 직원 건강관리 지원 부족으로 중대 질병 발병·병가 증가	• 성과 기반 일잘러 해외 배낭연수 도입으로 실질적 보상 및 일하는 분위기 확산 • 대기 규정 폐지로 워라벨 보장 및 당직자 부담 경감, 근무 만족도 제고 • 임신·생일·건강검진 등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로 직원 만족도 극대화 • 50대 이상 건강검진비 상향(50만원)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2026. 4. 24.)

- 공직사회 활력제고와 5대 국정과제 개선을 위한 당직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읍면 재택당직 근무 시 18:00~19:00 / 1시간 대기 규정 삭제

□ ’26년 소요예산

○ 해외배낭연수(일잘러 및 공모제) 1억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14억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5억

□ 추진일정

○ 2025. 12. : ’26년 직원 사기진작 복무제도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2026. 1. : 지원사항 홍보 및 제도 시행

○ 2026. 1. ~ 12. : 복지포인트 정산 상시 처리 및 이의신청 대응, 특별휴가 사용 현황 점검 및 제도 안내

○ 2026. 3. ~ 12. : 해외배낭연수(일잘러 및 공모제) 계획 및 추진

□ 홍보계획

○ 맞춤형 복지제도 및 사기진작 복무제도 지속적 홍보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1 AI 음성기반 하동 온(on)소리 구축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정보통신	연락처	055-880-2173

□ 추진배경

○ 고령화율 39.7%, 65세 이상 약 18,000명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비중 매우 높음

○ 면적 676㎢ 산간지형에서 GPS 오차 최대 50m - 정확한 위치 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신고 사각지대 다수

○ 별천지 5각 기동대라는 일상불편민원 접수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있으나, 연간 1,402건 민원을 단 3명이 전화·수기로 처리

□ 세부 추진사항

○ 경상도 방언 특화 AI 음성인식 기반 고령친화 민원 앱 개발

○ 각 가정에 NFC/QR을 보급하여 앱을 설치하지 않고 태깅 한번, 말 한마디로 민원 접수

○ NFC 위치코드 + GPS 4중 교차 검증으로 산간 지역 1m 이내 정밀 위치 자동 확보 및 별천지 5각 기동대에 좌표 전송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민원 평균 처리시간 72시간 → 36시간 단축
- 디지털 민원 신고 비율 15% → 40% 이상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전화 접수 및 수기로 전담부서 배정 • 관련 민원 접수 데이터를 담당부서에서 보관	• AI가 음성인식으로 신고 접수 및 전담 부서 자동 배정 • 관련 민원접수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편지도를 만들어 반복 민원 선제적 대응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AI 음성기반 하동 온(on) 소리 구축 2억

□ 추진일정

○ 2026. 5. : AI 음성기반 하동 온(on) 소리 구축 시행

○ 2026. 11. : AI 음성기반 하동 온(on) 소리 구축 완료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기획 기사 홍보

○ SNS 및 읍·면 오픈채팅방 등 게재 및 홍보

10-2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주관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기관/부서	-
담당팀명	민방위관제	연락처	055-880-2264

□ 추진배경

○ 2025년도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으로 대응 체계 고도화, 선제적 진로 예측 및 대피 유도 시스템 필요

○ 온디바이스 AI 기술 발전으로 엣지 기반* 독립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적기

* 엣지 기반: 인터넷 외 프로토콜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독립형 시스템

□ 세부 추진사항

○ AI 반도체 탑재 CCTV와 드론 등 장비 구축으로 연기·불꽃을 감지,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등 현장 실증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추진사항

- 2025. 6. : 온디바이스 AI 확산 실증·확산 사업 착수
- 2025. 8. : 산불감시용 드론 제작(1대)
- 2025. 9. :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
- 2025. 11 : 산불 감시 CCTV 7대 설치
- 2025. 12. : 관제센터 영상 1,000대 서비스에 연계 및 현장 실증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산불,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실시간 대응 가능한 자율형 안전 관제 체계 구축
- 산불 특화 드론으로 산불 진로 및 대피 유도 서비스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넓은 산림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 • 초기 감지 지연과 산불확산 경로 예측의 어려움으로 조기 대응 지연 • 유선망 장애 시 현장 상황 전달 지연과 관제 공백 발생	• AI 자동감지 시스템 기반의 재난대응 조기감지와 즉시대응(상황전파) 체계 구축 • 이동 경로 예측 기반 대응으로 위험지역 사전 통제, 인명피해 최소화 • 기기 자체에서 AI 처리 가능한 기술로 자율운영이 가능한 통합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분담금 2.3억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 참여기업 : 모빌리언트, 인텔리빅스,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택

□ 추진일정

○ 2026. 5. : 고도화 산불 드론 제작(1대)

○ 2026. 6. :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침수, 산사태 추가)

○ 2026. 10 : 드론 기반 실시간 진로 예측 시스템 구축

○ 2026. 12 : 드론 및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현장 실증

□ 홍보계획

○ 언론보도, 홈페이지 및 SNS 홍보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1-1 AI 정보혁신 교육

주관부서	행정과	협조기관/부서	
담당팀명	정보통신	연락처	055-880-2173

□ 추진배경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AI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

○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요구로 경험과 관행 위주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가 발생

○ 공무원의 AI 활용 능력은 미래 행정 환경에 필수적인 핵심 역량 강화 요소

- AI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생성형 AI를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 세부 추진사항

○ 단계별 교육 추진 및 심화 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 1단계 : 전 직원 대상 디지털 리터리시 및 AI 업무 활용 교육
  * 이론 위주 교육으로 직원들의 AI에 대한 이해 증진
- 2단계 : 희망 직원 대상 생성형 이미지 AI 실무 교육
  * 생성형 이미지 AI를 데이터 시각화, 군정 홍보 등 실무 활용 목적
- 3단계(심화과정) : 챗GPT와 파이썬 활용 업무 자동화 교육
  *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이수한 직원들 대상으로 심화 과정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생성형 AI를 통한 자체 제작 군정 홍보자료 20% 증가

  * 대표홈페이지 하동사랑방의 게시글로 측정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대다수 직원의 인공지능 개념과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성형 AI 활용 경험 편차가 큼 • 실무형 도구 활용 경험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 미미	• 전 직원 AI 기초 개념과 활용방법의 공통 이해 형성으로 조직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AI 활용 기반 마련 • 군정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과 데이터 시각화 등 보고자료의 완성도 제고 •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핵심 업무 집중 가능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생성형 AI 강사비 10백만원

○ 생성형 이미지 AI 소프트웨어 구입비 25백만원

□ 추진일정

○ 2026. 5. : (1단계) 디지털 리터리시 및 AI 업무 활용 교육

○ 2026. 7. : (2단계) 생성형 이미지 AI 실무 교육

○ 2026. 10. : (3단계) 챗GPT와 파이썬 활용 업무 자동화 교육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전 부서 교육 공문 발송

Ⅲ.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부혁신) 과제

1 무허가 건축물 상수도 공급으로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관부서	수도사업과	협조기관/부서	건축과, 재정관리과
담당팀명	상수도시설	연락처	055-880-2594

□ 추진배경

○ 군 지역의 경우 아직 관정(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많아 수질과 수량 부족 우려로 광역상수도 인입을 사업을 적극 추진

○ 현행 제도상 무허가 건축물은 법적 지위 문제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존재

-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 일부 주민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수, 간이급수시설 등에 의존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전용급수 및 시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적법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은 주민 갈등 초래

- 단순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실거주 주민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보장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사항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5.12.30.)으로 수돗물 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급수 공사 신청 가능

-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하동군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불일치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2026년 대상지 즉시 반영 : 무허가 건축물 54가구 상수도 공급

- 무허가 주택 거주민의 상수도 미공급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시행 전(AS IS)	시행 후(TO BE)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광역상수도 인입 불가로 물 복지 사각지대 발생 •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미보장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 확보로 주민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한 공공 급수 체계로의 전환으로 위생 관련 위험 감소 • 실거주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으로 공공서비스 접근 형평성 개선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25. 12. 30.)

□ 추진일정

○ ~ 2026. 4. : 적량면 영신원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행

○ ~ 2026. 6. : 횡천면 횡계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행

□ 홍보계획

○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로 보도자료 배포, 기획기사 유도

○ 공식 SNS 카드뉴스 제작

○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

Ⅳ. 지방정부 혁신 확산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타 지역의 우수 혁신사례 전파**

- 공문 외 내부 행정게시판과 다양한 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 정부혁신 우수사례 사례집 배부 후 부서별 검토 보고회 개최
- 하동군과 유사한 기반조건을 가진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인, 접목가능한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형·도입

○ **지역 현안 중심 문제해결과 실무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 실시**

- 주민 민원사항과 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 등
- 단순 강의식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체험을 통한 실제 업무 개선으로 연결

○ **신규·저연차 직원 중심 실무교육 강화**

- 반복 업무와 민원처리 사례 중심 교육
- 부서 단위 또는 관심 직원 중심의 소규모 학습모임(자율스터디) 운영

  * AI 활용사례, 우수 민원처리 사례 등 공유 등

○ **전 직원 대상 기초 디지털·AI 활용 교육 정례화**

- 필수 중심의 실무형 AI 교육 운영
- 문서작성, 자료정리, 민원응대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 중심 교육
- 반복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간단한 디지털 도구 활용

□ 성과 홍보 방안

○ **내부 참여형 홍보 강화**

- 공직 내부의 혁신성과 체득을 위한 사진, 사례 중심 자료 활용을 통한 직원 참여형 컨텐츠 제작
- 혁신 사례의 조직 내부 공유·공감대 형성 우선 후 외부 확산

○ **주민 체감 중심의 홍보 추진**

-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보다 주민생활의 체감 변화 중심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
- 정책 전·후 비교, 주민 인터뷰 등 현장 사례 위주의 실질적 변화 강조
- 주요 정책 대상(어르신, 청년 등) 맞춤형 핵심 정보 전달

○ **저비용·고효율 중심 홍보 추진**

- 보도자료와 군 홈페이지, 인스타·블로그 등 공식 SNS 활용
- 읍내 중심 회전교차로와 진교 민다리복합센터 대형 전광판 및 군 청사 로비 홍보 전광판을 통한 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송출
- 13개 읍면 소통방(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혁신 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